

Jun 2025.
No. 330

INSS

전략보고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김경숙 책임연구위원
kgs07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EU의 2030 방위전략 발표 배경
- III. EU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
- IV. 전망과 시사점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I. 문제 제기

II. EU의 2030 방위전략 발표 배경

1.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
2. 트럼프 2기 출범과 대서양 동맹 약화 우려
3.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신기술 등장

III. EU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

1. EU 2030 방위백서 :
유럽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2. 유럽 재무장 계획 2030 : 공동 방위 관련 대규모 재정 지원

IV.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 김경숙

국문 초록

EU는 유럽의 재무장(ReArm Europe)을 선언(3.4)하고, '유럽 방위태세 2030 공동 백서(이하 2030 방위백서)'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2030)을 발표(3.19)했다. EU 2030 방위전략의 배경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와 다극화된 세계로의 전환, 트럼프 2기 출범과 대서양 동맹 약화 우려,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신기술 등장에 기인한다.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은 첫째, 유럽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EU 2030 방위백서는 군사 장비와 무기 공동조달로 방위 역량 격차 해소, 7대 전략적 우선 분야 등 유럽 방위산업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고습도치 전략), 역내, 나토(NATO), 비EU 국가와의 방위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2030년까지 최대 8천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해 유럽 재무장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U의 2030 재무장 계획은 방위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자립적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방산시장 재편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정 부담, 정치·사회적 갈등, 역내 불균형, 글로벌 협력 약화 등 구조적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계획의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극화·복합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은 신규 시장 창출과 수출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기회이지만,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에 따른 진입장벽 등은 도전요인이다.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안보와 자율성의 균형을 재설정하고 다층적 접근을 통해 기회와 도전요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강하고, 지정학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對)EU 전략 재조정, 둘째, 상호신뢰에 기반 둔 한-EU 안보·방산 파트너십 강화, 셋째, K-방산강국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유럽의 재무장, EU 방위태세 2030 공동 백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맹약화, 전략적 자율성, 한-EU 안보·방산 파트너십

I 문제 제기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재무장(ReArm Europe)을 선언(3.4)하고, ‘유럽 방위 태세 2030 공동 백서(이하 2030 방위백서)’¹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2030)² 발표(3.19)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서양 동맹 약화와 동맹의 부담 압박이 가중되면서 EU는 2030년까지 유럽 자강을 위한 방위패키지 마련
 - ※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밝힌 ‘100일 이내 방위산업에 관한 보고서 발표 계획’의 후속조치로 집행위원장은 ‘평화 배당금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EU의 재무장을 강조³
 - 통합적인 방위 역량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구체화 등 유럽 군사적 대비 태세 보완·미래 대응력 강화에 중점
 - ※ EU는 트럼프 1기부터 상설구조협력(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프로젝트, 유럽 공동 방산 프로그램(EDIP)과 유럽 공동 방산 전략(EDIS), 유럽 방위 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 등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
- 이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지형에서 종전이 되더라도 러시아가 재무장해 우크라이나를 넘어 군사적 모험 시도 등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해 유럽의 안보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
 - 러시아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국경 등 서부 전선의 병력, 장비, 무기를 30~50% 확대할 계획⁴으로, 휴전이나 종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탈환 못 할 가능성도 존재
 - ※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 군대 재건에 러시아 경제, 제재 지속 여부에 따라 최소 5년으로 추정하면서도, 발트해에서 “지역 전쟁” 준비에는 2년, 단일 이웃 국가에 대한 “국지전”은 6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⁵

1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2 European Commission,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March 4, 2025,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European Commission,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defence package, March 4, 20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sv/statement_25_673 (accessed: 10 May, 2025).

3 European Commission,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4 NARVA, “Would Vladimir Putin attack NATO?,” Economist, 8 May, 2025,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5/05/08/would-vladimir-putin-attack-nato> (accessed: 10 May, 2025).

- 이에, 단기적인 조치의 시급성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응, 국가안보 전략과 방산의 연계가 긴밀해지면서 중단기적 방위 정책 전환의 필요성 대두⁵
- 본 보고서는 2030 방위패키지 분석을 통해 EU의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한-EU 전략적 협력방안 도출에 초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재조정 방침에 자강의 필요성 등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방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검토할 필요성 확대
 - EU는 유럽산 구매를 확대하면서도 무기 공동조달을 위해 제3국 무기 구매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 등 한-EU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는 만큼 대응 방안 모색

5 Ibid.

6 European Commission,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defence package, March 4, 20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sv/statement_25_673 (accessed: 10 March, 2025).

II EU의 2030 방위전략 발표 배경

1.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

-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와 다극화된 세계로의 전환으로 국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⁷하면서 유럽 안보의 대전환과 전략적 대응 불가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종전 협상 지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체계적(systematic) 도전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과 불안정성 심화로 유럽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
 - 러-우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러시아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의 위협은 더 심화될 수 있어 유럽 안보의 전략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비책 필요

2. 트럼프 2기 출범과 대서양 동맹 약화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적 동맹관에 따라 ‘유럽 안보의 유럽 책임’을 강조하면서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및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를 강조
 - ※ 연내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과 추가적 방위비 증액을 압박⁸
 - 뮌헨 안보 회의(2025.2.16.)에서 EU-미국 동맹 관계에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EU 주도의 방위 체계 구축 등 자강을 위한 EU 안보 전략 재정립 필요성 대두
 - EU는 트럼프 1기부터 유럽 내 공동 무기개발과 생산·조달 역량 강화, 병력 배치 등 다양한 군사 협력을 진행 중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U의 재무장에 대한 회원국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단합과 힘을 통해 우리 대륙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럽의 방위동맹(Defense Union)을 구축할 때”임을 강조(유럽의회 본회의 연설 3.11)

7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pp. 3-4.

8 Doug Bandow, “Donald Trump’s Mission Impossible: Making Europe Pay for Their Own Defense,” CATO Institute (2025).

3.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신기술 등장

- 러-우 전쟁으로 전장의 환경이 변하고 미래 전장에서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해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첨단 기술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영향력 위협도 고조
 -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6세대 전투기, 우주, 양자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국방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촉진 등에 대규모 투자 집중⁹
 - 러시아는 연방 예산의 40%와 GDP의 최대 9%를 국방비로 지출(2024)하는 등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¹⁰
 - 한편, AI 등과 연계된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하이브리드 공격,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의 초국경·초연결성 심화
 - ※ 러시아는 2023년 비밀 공작부대인 '특수임무국(SSD)'을 신설하는 등 정보전·사이버전·심리전을 조합한 '하이브리드전쟁'에 총력¹¹
-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공격적인 핵 공격 위협과 군비 증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난 5년간 직전 5년(2015~2019년) 대비 무기 수입이 155% 증가¹²
 - 유럽은 2020~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28%를 차지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5년(2020~202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8.8%)으로 부상¹³
 - ※ 아시아-오세아니아(41%→33%), 중동(34%→27%) 등의 비중 감소
 - EU는 러-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의 군사 팽창주의로 유럽의 안보를 위한 방위비 지출과 재무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식

9 이성훈, “미중 간 첨단무기 개발 경쟁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682호(2025.4.25.) 참조.

10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p. 3.

11 Bojan Pancevski, “A New Spy Unit Is Leading Russia’s Shadow War Against the West,”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5, 2025. <https://www.wsj.com/world/europe/russia-spy-covert-attacks-8199e376>

1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2025.3.10.)

13 Ibid.

III EU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

1. EU 2030 방위백서 : 유럽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가. 군사 장비와 무기 공동조달로 방위 역량 격차 해소

- 회원국 별 분산된 방산물자 수요통합 및 공공 조달 확대로 효율성 및 상호 운용성 촉진
 -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유럽 방위에 있어 즉각적이고 가장 긴급한 과제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급감한 회원국들의 탄약 등 방산물자 공동조달과 방위력 증강은 시급한 장기적 필요성
 - ‘유럽 공공조달 우선권’에 따라 핵심 산업 및 전략 기술 분야에서 EU 내 조달 및 생산 강화 등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 회원국 간 기술 격차 및 의존성 문제 해결에 역점
 - ※ 공동조달은 탄약, 미사일 및 드론과 같은 대량의 ‘소모품’을 조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회원국은 2007년 이래로 유럽방위청(EDA)의 틀 안에서 전체 방위 장비의 35%를 공동 조달했으나 이를 상향 조정¹⁴
-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7대 우선순위 분야 선정 및 이에 대한 회원국 간 이해 공유
 - 방위 재건 및 역량 부족 해결, 새로운 위협 대응을 위한 민첩하고 탄력적인 첨단 방위 시스템을 위해 회원국 간 격차가 큰 7대 우선순위 분야에서 신속한 재무장 필요(<표 1> 참조)¹⁵
 - ※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간 1400기 이상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Kh-101 순항 미사일 500기, 1500~2000대의 전차와 3000대의 기타 장갑 전투 차량 생산 가능, 드론을 이용한 표적 탐지 및 타격 등 일부 분야에서 성능개선¹⁶
 - 방산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 기술보장제도(Skills Guarantee)를 통해 방산 포함 다른 산업으로의 경력전환 유도

14 2030 국방백서에서 제안된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의 승인, 필요시 유럽의회의 승인 필요

15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p. 7.

16 NARVA, “Would Vladimir Putin attack NATO?,” Economist, 8 May, 2025,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5/05/08/would-vladimir-putin-attack-nato> (accessed: 10 May, 2025).

〈표 1〉 7대 전략적 우선 투자 분야

분야	세부 내용
① 항공·미사일 방어	통합적·다층적 유럽 통합 방공체계 구축, THAAD급 방어 시스템 개발 추진
② 포병 시스템	정밀타격 및 원거리 공격 가능 장사정포·다연장로켓(MLRS) 시스템 확보 및 현대화
③ 탄약·미사일 비축	‘Ammunition Plan 2.0’ 기반 전략물자 비축 및 생산능력 확보 *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 200만 발 목표(2023년 대비 4배 증산)
④ 드론(무인항공기)·대드론 시스템	소형 정찰 드론(NATO Class 1)부터 중무장 전투 드론(NATO Class 2, 3)까지 정찰, 감시, 전투용 드론 체계적 개발
⑤ 군대 이동성	역내 및 제3국 전략적 병력 신속 배치 향상,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인프라 확충
⑥ AI·양자·사이버·전자전	AI 기반 지휘통제체계(C2), 양자 암호통신 기술 개발 가속화, 공격·방어용 사이버 능력 개발
⑦ 전략적 지원 인프라 보호	공중급유기·전략수송기 증강, 해양인자·우주기반 정찰 및 감시체계 구축

* 출처 : EU 2030 방위백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

나. 유럽 방위산업 역량 강화

■ EU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및 역내 방위 시장 확대

- 유럽의 방산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절화된 EU 역내 방위산업 시장 통합 및 안정적인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체계적인 수요 관리 및 생산계획 수립 지원
 - ※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방위산업·우주 전담 총국(DG DEFIS) 신설, 2024년에 첫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 임명 등 방산 정책 강화
-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등 과도한 역외 의존은 유럽의 자체 방위력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역내 방산 제품 생산 및 조달에 집중하는 ‘유럽산 무기 구매(Buy European)’ 확대
 - ※ 최근 5년(2020~2024년)간 나토 유럽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 비율은 확대(52%→ 64%)되었지만, 프랑스·한국산 무기 수입은 각각 6.5%, 독일산은 4.7% 수준¹⁷
- ‘바이 유럽피안(Buy European)’ 조항에 따라 회원국들은 EU·EFTA·EE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방산물자를 구매해야 하며, 무기 비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상기한 국가 내에서 생산 조건 충족 필요(SAFE 규칙 제16조 제8항)

17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 무기 거래 동향, 2024.” (2025.3.10.)

- 기술 자주성 확보를 위한 방위산업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촉진
 - 신기술에 대한 군의 수요 증가로 드론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 AI 및 양자 컴퓨팅 등 파괴적 기술을 방위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혁신기술 R&D 투자와 EU 공동 프로젝트 지원
 - ※ EU는 이미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과 같은 주요 정책 문서에서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민간 기술의 방위 활용을 강조
 - 이를 위해 EU의 방위 혁신 계획(EUDIS)과 방위 혁신 허브(HEDI), 유럽혁신기금 활용

-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
 - 핵심 방위 기술 전담기구(우주 방위 핵심기술 관측소) 설립 및 유럽 방위기금 프로젝트나 이중용도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술, 부품, 공정의 국산화 지원
 - ※ 우주 방위 핵심기술 관측소(Observatory of Critical Technologies, OCT)는 핵심적인 방위 기술에 대한 지식 축적·모니터링·관련 기술 로드맵 개발 전담
 - 희토류·반도체 등 핵심 자원의 역내 생산량 2030년까지 40% 확대 등 공급망 재편, 방위산업 협력 프로젝트 시 회원국 간 인증·조달 절차 통합 추진 등 규제 조화·간소화
 - ※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영국)은 EU의 방위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3.12)
 -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산업 관련 전략 대화를 통해 2025년 6월까지 전용 국방 옴니버스 간소화 (Defence Omnibus Simplification) 제안을 제시할 예정¹⁸

- 극단적 우발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적 이동성 향상 및 국경 경계 강화 등 EU 준비 태세 강화
 - 기술과 기동성이 장착된 더 민첩하고 전문적인 군대를 조직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국경 강화
 -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등을 활용해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포함한 전략물자 비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유럽의 준비태세 강화
 - ※ 회원국 간 군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한 EU 차원의 법률 검토

18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p. 9.

다. 우크라이나 지원('Porcupine Strategy 고슴도치 전략')

- EU는 러-우 전쟁의 결과와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유럽 전체의 미래의 토대가 될 것을 강조¹⁹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
 - 우크라이나에 군사·훈련, 포탄, 방공시스템, 드론 등 군사 장비 지원, 현지 생산역량 및 군대 이동성 강화와 같은 안보보장 조치를 지속해서 지원
 - ※ 2022년 2월부터 EU와 회원국들은 유럽평화기구(European Peace Facility)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제공²⁰하였으며 연간 200만 발의 포탄 공급을 목표로 설정
 - 유럽방위산업계획 신속 채택 지원, 키이우 주재 EU 방위혁신사무소(EU Defence Innovation Office) 확대 등 EU-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통합 및 방위 역량 개발 지원

라. 역내, 나토(NATO), 비EU 국가와의 방위협력 증진

- 유럽 역내는 물론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공급망 다변화와 역내 자립화를 위해 나토, 역내외 EU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 유럽 안보의 축인 나토, EU 주변국,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방산 네트워크와 연계 강화 및 다양한 방위협력 프로젝트 참여 독려
 - ※ 나토는 민군겸용(dual-use) 기술에 초점을 맞춘 나토혁신펀드(NATO Innovation Fund)를 발표²¹
 - EU는 회원국 간 방위협력 프로젝트인 상설구조협력(PESCO)에 프로그램에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의 제3자 참여를 독려하고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를 중요한 안보·방위 협력 파트너로 강조
 - ※ 영국국방부는 연간 국방예산의 5%인 27억 파운드(약 4조3000억 원)를 연구개발에 배정했으며, 추가로 예산 2%를 유망한 군사기술과 응용과학 지원에 배정²²

19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20 Ibid. p. 10.

21 Sylvia Pfeifer, John Paul Rathbone, Christopher Miller, "The age of drone warfare is disrupting the defence industry," *Financial Times*, 8 July, 2024, <https://www.ft.com/content/cf6ded0f-f595-4359-b8f7-273799f1149c> (accessed: 7 April, 2025).

22 Ibid.

2. 유럽 재무장 계획 2030 : 공동 방위 관련 대규모 재정 지원

- 2025년부터 5년간 최대 8천억 유로(1,500억 유로는 SAFE 자금, 6,500억 유로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총당) 방위 투자 자금 조달 계획²³으로 새로운 재정 지원 전담 기구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²⁴ 신설
 - SAFE는 EU 차원에서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1,500억 유로의 EU 공동 대출 기금을 담당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우선 역량 집중과 유럽 방산시장으로부터 공동조달을 통해 국방 투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장기 대출 형태 등 공적자금 지원 확대

- EU의 재정준칙(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예외조항을 발동해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촉진
 - 회원국이 방위 지출 확대 시 재정 적자 기준(GDP 3%) 적용 면제 및 추가로 4년간 EU 전체 GDP의 1.5% 방위비(6,500억 유로) 예산 활용 허용
 - EU 회원국들이 부채 한도 제약 없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수 방위 장비를 공동 조달 지원
 - ※ 독일은 최대 1조 유로(1590조 원) 국방투자 계획 발표,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 등 핵미사일에 집중 및 군 현대화를 위해서 15억 유로(약 2조3800억 원) 투자

- EU 내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중기 검토에서 방위 분야 투자 증액 검토,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 조달 역할 확대와 민간자본의 국방 부문 투자 유도
 - ※ EIB는 연간 20억 유로를 드론, 우주, 사이버보안, 양자 등에 투자하고, EU 집행위원회는 민간자본의 방산 투자 유도를 위해 저축투자연합 전략(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Strategy) 채택

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24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March 19, 2025

IV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 EU의 2030 재무장 계획은 방위력 강화와 자립적 공급망 구축, 글로벌 방산시장 재편 등 기회요인도 있지만, 재정 부담, 정치·사회적 갈등, 역내 불균형, 글로벌 협력 약화 등 구조적 한계도 내포

가. 기회요인

- 첫째, 방위력·공급망 강화와 자주적 안보체계 구축
 - EU가 2030년까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미국 없는 NATO’는 어렵더라도 미국 의존도 축소 및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EU-NATO 상호 운용성 향상 전망²⁵
 - ※ EU 이사회는 6월 26-27일에 방위백서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EU 집행위는 ‘방위 옴니버스 규정 (Defence Omnibus Regulation)’ 등 방위백서에서 제안된 이니셔티브를 우선 추진할 계획
 - 유럽은 더 독립적인 전략 행위자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및 평화유지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
- 둘째, 범유럽 협력과 산업생태계 재편
 - EU는 회원국 간 공동조달, 역내 생산·부품 사용 비율(65% 이상) 확대,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 등으로 방산 생태계의 통합과 공급망 내재화에 집중, 방산시장과 군수 능력의 대규모 성장 도모
 - 첨단 소재, AI, 드론, 사이버, 우주 기술 등 첨단 방위 기술 분야에 대한 발전과 관련 민간 산업에도 파급 효과
- 셋째, 글로벌 방산시장 구조 변화
 - 유럽 각국의 재무장과 자립화 전략은 미국, 한국 등 비EU 방산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동시에, 현지화·합작생산 등 진입 조건을 강화해 글로벌 방산시장 구조에 큰 변화 견인

25 Gideon Rachman, “Trump is making Europe great again”, *Financial Times*, March 10, 2025,

나. 제약요인

- 첫째, 회원국의 재정 부담 가중 및 사회적 갈등,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와 지속가능성 우려
 -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복지 예산 삭감, 건축 재정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재정 부담 가중 우려 등으로 2030년까지 유럽 방위태세 전환에 의구심
 -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GDP 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회원국은 국방비 증액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을 우려
 - 회원국의 정치 상황, 경제 여건, 국민적 합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무장 계획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차질 우려
 - ※ 유럽은 2016년 『EU 글로벌 전략』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공식화했으나 재정 문제와 회원국의 이견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체

- 둘째, 역내 불균형 및 산업 경쟁력 차이, 글로벌 파트너십과 외부 의존성 문제
 - 역량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방산 역량, 투자 여력, 인프라 수준 차이로 인해 역내 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조달 등에서 갈등 심화 우려도 존재
 - EU가 한국 등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조하지만, ‘유럽산 우선’ 정책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비EU 국가와의 기술·부품 협력에 차질을 빚을 우려
 -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경직성과 유럽 방산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2. 시사점

- 다극화·복합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유럽의 재무장과 미국 의존도 축소 전략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
 -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 유럽의 신규 시장 창출과 안보가 민감한 동유럽 등의 신속 전력 보강 수요 등은 한-EU 안보·방산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반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에 따른 진입장벽,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방산 선진국의 견제, EU 무기 공동조달 참여의 까다로운 조건은 도전요인
 - ※ 세계 무기 수출 2위국인 프랑스의 탈레스를 비롯해 독일의 라인메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 유럽의 대표적 방산업체들의 견제 예상²⁶

26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2025.3.10.); 심성은, “유럽의 재무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2348호(2025. 4. 17), p.3.

- 한국은 전통적 동맹 구조의 재조정²⁷에 맞춰 안보와 자율성의 균형을 재설정²⁷하고 다층적 접근을 통해 기회와 도전요인을 잘 관리할 필요
 -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요구 등 미국의 동맹 책임분담 압박과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강하고, 유럽과 상호 보완적 협력 모색

- 첫째,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對) EU 전략의 재조정 필요
 - EU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파트너”로 협력 확대를 명시한 만큼,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EU 안보방위 파트너 등 한-EU 제도적·정책적 협력 채널을 다각화해 지정학 리스크에 유연 대응 필요²⁸
 - ※ 2024년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공식 체결(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분야 협력)
 - 북한 위협 대응, 인태 지역 안보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및 군수 지원, 경제안보·공급망 협력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한-EU 안보 대화와 정보 공유 협력 확대
 - 특히 반도체, 희토류 등 전략물자 공급 협력 확대, 공동 비축과 기술 교류 등 경제안보 연계 전략을 강화

- 둘째, 바뀌는 글로벌 방산 환경에 상호신뢰에 기반 둔 한-EU 안보·방산 파트너십 강화
 - 무기수출 대상국은 무기체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호 군수체계 연합이며, 유사시 무기나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
 - 단기적으로는 동유럽 등에서 K-방산의 경쟁력(품질, 납기, 가격)을 바탕으로 수출 기회 확보,²⁹ 진입장벽에 대비 유럽 현지화·합작 투자, AI·드론·양자·사이버·우주 등 7대 우선 분야 공동 R&D 및 투자 확대
 - 무기 수출 세계 2위인 프랑스, 독일(5위), 이탈리아(6위)³⁰는 동유럽 진출에 적극적이며, 영국은 EU와 방위·안보 협정 추진 중으로 EU의 방산시장 경쟁 과열화에 대비해 K-방산의 강점 부각 및 약점 보완
 - ※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 강화

27 김경숙, 『EU의 독자 안보역량 강화 실태 및 전망』, INSS 연구보고서 2020-2 참조.

28 김경숙, 『EU의 독자 안보역량 강화 실태 및 전망』, INSS 연구보고서 2020-2 참조.

29 <https://v.daum.net/v/20250409002628160>

30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2025.3.10.)

- 셋째, K-방산강국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과 민관협력 강화
 - 정부는 외교적·금융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최첨단 IT 기술 장착된 무기체계 개발 및 EU의 방위 기술 표준을 반영한 제품 개발 가속화로 경쟁력 제고
 -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 방산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되며 아시아, 중동, 남미 등 다른 지역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
 - ※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의 대규모 수주 사례와 현지 생산 기지 설립은 한국 방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입지 확장에 직접적인 동력³¹
 - 국익 차원에서 EU 공동조달 입찰 시 코리아 원팀의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하고, 안보 전략과 방위 산업의 연계성이 긴밀해지면서 방산 기술·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 안보도 강화할 필요

31 <https://www.inews24.com/view/1830201>

참고문헌

- 김경숙. 『EU의 독자 안보역량 강화 실태 및 전망』. INSS 연구보고서 2020-2.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2025.3.10.)
- 심성은. “유럽의 재무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2348호(2025. 4. 17).
- 이성훈. “미중 간 첨단무기 개발 경쟁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682호(2025.4.25.).
- Bandow, Doug. “Donald Trump’s Mission Impossible: Making Europe Pay for Their Own Defense.” CATO Institute (2025).
- European Commission. JOINT WHITE PAPER for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Brussels, March 19, 2025 JOIN(2025) 120 final.
- _____.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defence package, March 4, 202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sv/statement_25_673 (accessed: 10 March, 2025).
- _____.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 March 4, 2025,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793 (accessed: 10 March, 2025).
- _____. Regulation establishing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European defence industry Instrument.
- Gideon Rachman. “Trump is making Europe great again.” *Financial Times*, 10 March, 2025,
- NARVA. “Would Vladimir Putin attack NATO?,” *Economist*, 8 May, 2025,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5/05/08/would-vladimir-putin-attack-nato> (accessed: 10 May, 2025).
- Pancevski, Bojan. “A New Spy Unit Is Leading Russia’s Shadow War Against the West,” *The Wall Street Journal*, 15 February, 2025. <https://www.wsj.com/world/europe/russia-spy-covert-attacks-8199e376>
- Pfeifer, Sylvia, John Paul Rathbone and Christopher Miller. “The age of drone warfare is disrupting the defence industry,” *Financial Times*, 8 July, 2024, <https://www.ft.com/content/cf6ded0f-f595-4359-b8f7-273799f1149c>

Abstract

Transformative Features of the EU Defense Rearmament 2030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

Kyoung-sook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EU declared its rearmament initiative (ReArm Europe) on March 4, and subsequently released the Joint White Paper on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 and the ReArm Europe Plan 2030 on March 19. The background to the EU's 2030 defence rearmament lies in the weakening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transition to a multipolar world, concerns over a potential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erosion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as well as intensifying global arms competition and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The EU's 2030 Defence Strategy represents a transformative shift. First, it introduces a new approach to strengthening Europe's defence posture. The 2030 Defence White Paper aims to close capability gaps through the joint procurement of military equipment and weapons, strengthen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seven strategic priority areas, support Ukraine through a "porcupine strategy", enhance defence cooperation within the EU, with NATO, and with non-EU countries. Second, the EU plans to mobilize up to €800 billion by 2030 to implement the rearmament initiative. While the ReArm Europe offers positive aspects—such as enhanced defence capabilities, support for Ukraine,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supply chains, and a restructuring of the global defence market—it also faces structural limitations. These include financial burdens, political and social tensions, internal imbalances, and the weakening of global cooperation. This dual nature is expected to become a key variable influencing the plan's practical outcomes and sustainability. In today's increasingly multipolar and complex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Europe's rearmament offers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must strengthen its independent defence capabilities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build complementary cooperation with Europe to respond flexibly to geopolitical risks.

Europe's rearmament policy provides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 including access to new markets and expanded export prospects. However, it also presents challenges, such as market entry barriers posed by the EU's "Buy European" policy. As security connectivity between Asian and Europe are strengthening, South Korea needs to redefine the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autonomy, and adopt a multi-layered approach to effectively manage both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this end, South Korea should take the following steps: First, recalibrate its strategy toward the EU.

Second, strengthen a trust-based ROK-EU security and defense partnership. Lastly, maintain policy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and enhanc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establish itself as a leading defense industry power (K-Defense).

Keywords: European Rearmament, EU Joint White Paper on Defense Readiness 2030, Russia-Ukraine War, Weakening of Alliances, Strategic Autonomy, ROK-EU Security and Defense Industry Partnership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 2025.
No. 330